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7
----------	------

발의연월일 : 2024. 7. 8.

발 의 자 : 박홍근 · 이기현 · 이수진

김영호 · 박상혁 · 정을호

정준호 · 진성준 · 문금주

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9%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른바 ‘인천라면 형제’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등한시되어 왔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정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

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다.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3항).

마. 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뤄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
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
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양육비의 지급 의무)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비 대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이하 “양육비 대지급”이라 한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제7조에 따른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6조(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한다.

②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해당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양육비결정위원회)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육비 대지급 결정의 요지, 양육비 대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통지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 양육비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재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용환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반환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리의 보호) ①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양육비로 지급받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
지급